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의 관전포인트

이 교 덕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가 4월 7일과 8일의 대의원등록에 이어 9일 개최된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3월 18일 공시되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하긴 하나 본래 그 역할이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한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데 있기 때문에 북한정치의 가늠자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의 개최는 북한이 매년 거행해오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주목해볼 대목은 있다. 단적으로 회의가 예년처럼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점만으로도 김정일정권에 이상조짐이 없다는 것은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는데 정기회의는 연 1-2회 열린다. 통상 3-4월에 개최되는 상반기의 정기회의는 전년도 사업정형 및 당해년도 과업 보고, 전년도 예산결산 및 당해년도 예산심의에 주안점이 있고 9월의 하반기 정기회의는 주요 인사 및 조직개편, 법안 개정 등 당면의제가 논의된다. 김일성정권에서는 정기회의가 1년에 두 차례 열린 적이 있었으나 김정일정권에서는 2003년 한 해 뿐이다. 이때는 3월에 상반기 정기회의가 열린 뒤 5년의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새로 선거를 치러 9월에 제11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때문이다. 이 경우를 감안하면 제11기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8년에도 정기회의가 두 차례 소집되어야 했으나 상반기 회의만 열렸다. 하반기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김정일의 건강이상 때문이었던 듯하다.

원래의 일정대로라면 2008년 9월에 개최되어야 하는 제12기 최고인민회의는 약 6개월 늦게 2009년 3월의 대의원 선거를 치러 구성되었고, 4월 9일 1차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국방위원회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주요 인사를 단행했으며 헌법을 수정했다. 수정헌법에서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통치이념으로 명문화했고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2기 제2차회의의 안건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정기회의임에 미루어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이 강조된 만큼 이와 관련된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경공업부문 및 농업부문의 생산증대와 생필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재원 투입 증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일정권에서는 정기회의가 1년에 한 차례 개최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조직문제나 법령 제·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에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설립, 국가개발은행 설립 추진,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라선시 개발 등에서 보듯이 북한당국이 외자유치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외자유치를 위한 후속 조치나 법령정비의 가능성도 있다. 경제관련 법률은 2000년 이전에는 제10기 제2차 회의(1999.4.7-9)에서 채택한 인민경제계획법 등 계획경제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제10기 제6차회의(2003.3.26)에서 채택한 회계법 등 시장질서 도입과 대외개방에 대비하는 제·개정이 많았다. 그러나 작년 화폐개혁을 전후로 양곡압거래를 금지하는 양정법과 부동산 사용료 징수 근거를 구체화한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 기준의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규정한 물자소비기준법 등 대체로 계획경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의 11개 법령이 제·개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정식으로 채택 되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의 향방과 관련하여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의 출석 여부도 관심을 끈다. 그는 화폐개혁 실패 책임을 지고 숙청 또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불참한다면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이 확실하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내각에서 당으로 전환되면서 보수색채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는 중심에서 있었다. 그의 숙청은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대내외적 환경을 감안할 때 근간 북한 국내정치 측면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김정일의 건강여부와 후계체제 구축 징후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최고인민회의 참석여부도 주목대상이다. 2000년대 들어 김정일이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은 제10기 제6차회의(2003.3.26), 제11기 제2차회의(2004.3.25), 제4차회의(2006.4.11), 제6차회의(2008.4.9)였는데, 이 회의들은 주로 예산회의였다. 이번 회의도 예산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고 김정일이 격년으로 참석해 온 점을 고려하면 그의 불참이 예견된다. 또한 최근 북한에서 후계자 내정설이 도는 3남 김정은을 이상화하기 위한 노래 및 공연극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 후계문제와 관련된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도 관심을 끄는 점이다. 그러나 후계체제 구축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국방위원회 개편과 강화 조치가 이미 작년 제1차회의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권력누수의 위험성과 3대세습에 대한 비판적 시각, 최고인민회의의 형식적 역할 등에 비추어 그런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주목을 끈 적은 한 차례 있다. 제11기 제1차회의(2003.9.3)에서 최고인민회의는 6자회담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고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북한 외무성의 조치를 승인한다는 결정을 채택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미국이 새로 제기하여 미·북관계가 파국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요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력한 협상카드인 6자회담 참가를 만지작거리면서 암암리에 그 대가를 높이려는 북한이 공개적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6자회담 참가와 관련한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